

# 건전한 '도서관문화', 무엇이 걸림돌인가

턱없이 낮은 도서구입비, 입찰계약제 등 도서관 환경 개선돼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은 시장을 통해 유통된다. 책도 하나의 상품인 이상 시장에서 그 가치를 검증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책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실용성과 효용성만으로 측정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책 속에는 물질화·계량화하기 어려운 인간영혼의 숨결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책은 한 개인의 독점적 소유에 의해 그 쓸모가 다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공유될 때 좀더 풍요로워진다. 결국 책은 공적인 투자에 의해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다. 공공도서관이 출판시장의 '큰손' 이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장서비중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아직까지 '구두쇠' 구매자에 머물고 있다. 공공도서관협의회(회장 정기영)에 따르면, 97년 말 현재 370개 공공도서관의 1년 예산 약 1,647억원 가운데 자료구입비는 약 173억원으로 10%에 지나지 않는다. 인건비(약 60%)와 기타 운영비(약 30%)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편이다. 1인당 책수도 평균 0.38권으로 미국과 영국의 2.7권, 일본의 1.5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독서문화와 출판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조감해볼 수 있다. 도서관의 수서업무는 장서구성의 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궁극적 목적인 이용자 서비스업무 과정 중의 첫 단계가 된다. 현재 공공도서관은 매년 초 연간 장서구성계획을 확정하고 장서구입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자료를 수집한다. 1년에 8차, 1차수마다 2~4명의 수서원이 3~5회에 걸쳐 서점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1,300~1,500원 정도의 도서자료를 수집한다. 도서정보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료를 입수하기도 하지만 현장수서를 보충하는 선에서 그친다.

중로도서관의 한상준 관장은 "수서원들이 출판된 책의 내용을 전부 보고서 수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공공단체의 검증을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인 도서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좀더 효율적인 수서업무가 가능하다"고 말

한다. 출판사나 서적상, 그리고 언론매체의 정보는 확실하거나 객관성을 결여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수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한국도서관협회(회장 사공철)의 이용훈 부장은 "공정하고 권위 있는 서평전문지와 함께 각 공공단체의 우수도서 추천제를 활성화해 이를 수서과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현장수서를 마친 후 구입예산도서가 이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지 또는 주문중에 있는지의 상태를 조사하고 구입심의대상자료 목록을 작성한다. 이 목록을 토대로 도서관의 관장 및 각과의 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자료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문도서목록을 확정한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조석순 교수는 "자료선정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과 이용자 각 계층의 요구 및 관심분야를 두루 반영할 수 있는 위원이 위촉되어야 한다"면서 출판계·서점계·유통계·시민대표 등이 선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한다.

선정된 도서는 입찰계약(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자가 납품한다. 이 입찰에는 도매업자나 소매업자, 납품전문업자들이 참여하고 대략 도서정가의 73~80% 선에서 입찰가가 결정된다. 납품업자들로부터 들어온 책은 저자·출판사·판쇄 등의 사항을 점검하는 '검수'와 '등록'을 마치고 바코드 출력과 부착, 등록번호를 매기는 '장비'를 거쳐 서가에 꽂힌다. 구입자료수집부터 최종적으로 열람자들이 이용할 수 있기까지 대략 1~2개월 가량 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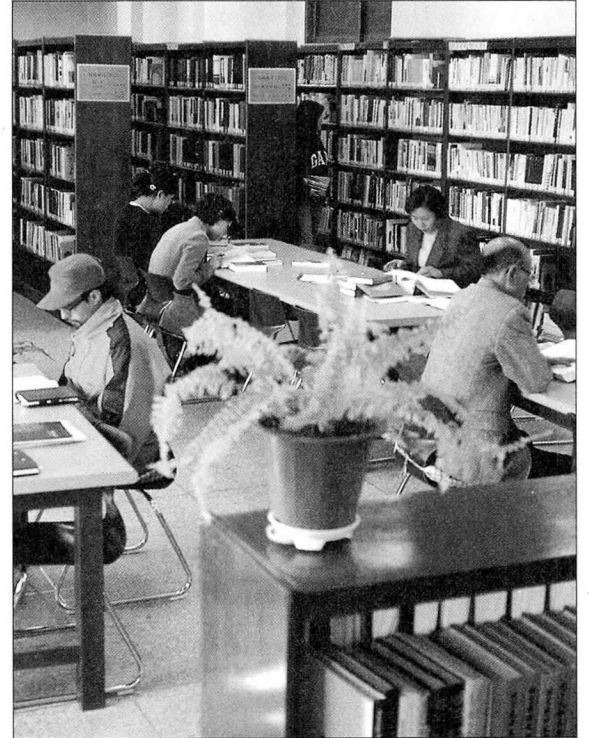
## 입찰계약제는 수서구입제로 바뀌어야

공공도서관의 입찰계약제는 출판계가 도서관행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대표적인 경우 속한다. 도서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도서는 정부기관의 '자산취득비' 예산항목에 포함되어 일반비품과 동일하게 구입된다. 책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못한 것이다. 어느 한 시점에서 많은 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신간이 입수되어 이용자들에게 돌아가는 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수서원들의 업무량도 과중하게 될 수밖에 없다.

입찰제는 도서정가제를 정부가 스스로 허

## 공공도서관의 수서업무가 입찰계약으로 이뤄짐으로써 출판유통의 이윤이 출판계로 돌아오기보다 개인의 치부로 연결될 여지가 많고, 마진율이 낮은 양서는 제외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공공도서관의 수서업무가 입찰계약으로 이뤄짐으로써 출판유통의 이윤이 출판계로 돌아오기보다 개인의 치부로 연결될 여지가 많고, 마진율이 낮은 양서는 제외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도서관은 새로운 정보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무는 결과도 가져온다. 한국출판협동조합의 성의현 과장은 "도서정가제가 인정된 나라에서 공공도서관이 입찰계를 통해 도서를 구입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개인업자들에게 입찰권이 돌아가면 출판유통의 이윤이 출판계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치부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론과실천사의 김태경 대표는 "납품업자들은 궁극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유통마진율이 높은 도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마진율이 낮은 고급학술도서들은 제외될 소지가 많다"고 한다. 입찰제가 수서로 도서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출판문화에 대한 도서관의 기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신간이 수서되어 열람자들에게 이용되는 시간이 너무 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국도서관협회 조원호 사무총장은 수서업무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CIP(Catalogue in Publication)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한다. 이는 각 출판사들이 도서의 서지데이터(서명·저자명·총서관계·국제표준번호 등)를 미리 인쇄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가 도

입되면 책이 입수되어 서가에 오르는 시간이 단축되고 또한 도서정리에 투입되는 인력이 줄 수 있어 이용자지도 등의 인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한다.

## 도서관 이용자들의 인식전환 필요

무엇보다도 도서관 이용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다. 이용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부와 학생층들은 베스트셀러나 무협지 등을 요청하고 있어 건전한 도서관문화와 출판문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아직도 도서관을 새로운 정보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공부방'으로만 생각하는 이용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독서문화와 출판문화는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공황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출판계는 정부의 유통현대화 대책 마련과 함께 공공도서관의 역할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일지사의 김성재 대표는 "상업성을 목표로 하지 않은 도서일수록 도서관에서 많이 구입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부족과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오히려 외면당하는 실정이다"면서 "공공도서관에서 의무적으로 양서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박천홍 기자